

충남리포트 제124호

# ChungNam Report

2014. 08. 21.

##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

김찬규 충남발전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, [kck0564@cdi.re.kr](mailto:kck0564@cdi.re.kr)  
이건범 한신대학교 교수 & 허석재 목포대학교 박사

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고, 충남이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을 확립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### 요 약

- 한국경제는 IMF 이후 성장률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, 이와 함께 고용부진, 가계부채 증가, 빈곤현상의 심화 등 위기적 현상에 직면.
- 한국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볼 때, 구조전환의 시간과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추세의 회복이 필요.
- 새로운 성장은 양질의 고용이 늘어나고,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,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, 혁신과 창의력이 뒷받침되는 성장이어야 함. 또한 성장과실이 골고루 돌아가야 하며,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어야 함.
- 한편, 이러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는데 있어 한국의 높은 무역 의존도, 낮은 민간소비, 구조적으로 취약한 고용상황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.
- 따라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‘혁신’, ‘협력과 평화’, ‘균형’, ‘사람투자’이어야 할 것임.
-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, 충남은 민간기업의 혁신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의 혁신이 필요. 대중국 교류관문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협력과 개방 경제를 선도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충남은 다른 지역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면서 광역경제권별로 특화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균형발전 의제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. 마지막으로 유아기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.

### CONTENTS

#### 〈요 약〉

1. 한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
2. 성장은 필요한가?
3. 새로운 성장전략의 모색
4. 충남이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



# 한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◀

## 01

### 1) 한국은 성공신화의 나라

#### ● 한국의 경제성장 신화

- 과거 25년간 실질 GDP 증가율 세계 4위(중국, 아일랜드, 인도 순서), GDP 총액 세계 15위 국가(구매력 기준 12위)
- 1인당 GDP순위 33위(구매력기준, 30,340달러, 22위/대만 18위, 일본 21위)
- 수출액순위 7위(2012년, 2008년 12위에서 상승)(독, 중, 미, 일, 네, 프 순서)
- D램, 휴대전화, 디스플레이, 조선 등 세계시장 점유율 1위, 자동차 시장 세계 점유율 5위, 철강 세계 점유율 6위 등 한국이 전세계시장에서 수출이 점유하는 비율은 1970년 0.3%에서 2012년 3.1%로 상승
- ➔ 한국은 지난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실현한 국가로서 최빈곤 국가에서 중소득 국가로 도약하였음

#### ●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

- 근면하고 우수한 노동력: 높은 교육수준, 세계적으로 높은 근로시간, 공교육에 대한 높은 투자, 신속한 학문 유입(인구대비 해외 유학생 세계1위 2012)
- 높은 투자를 가능하게 한 내외자 총동원 체제: 고도 성장기 높은 국내 저축률, 외자의 적극적 유입, 정부주도 자본 조달과 배분
- 평등주의에 기반한 강한 성취동기, 사회적 규율(discipline), 개인을 기초로 한 강한 자부심 등 도전적 자세

- 고도성장기 한국 경제성장에 유리한 국제정세(분단국가, 동북아 교두보)
- 국가주도 성장전략 : 발전국가(developmental state) 전략

#### ● 고도성장기 국가주도 성장전략

- 정부 주도의 자원배분, 산업 및 공간 불균형 성장
- 적극적인 산업정책(industrial policy) 추진: 수입대체를 넘어 수출주도형 성장
- 내자 및 외자 동원의 극대화를 위한 금융산업의 정책적 활용
- 가족주의, 공동체 주의 : 복지공백 대체, 가족을 위한 주택의 자가소유 집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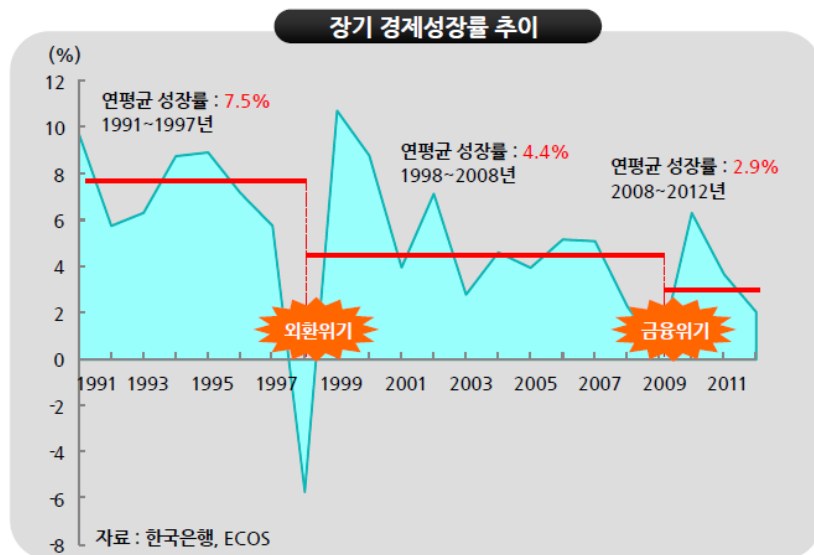
#### ● 그러나 과잉투자과 준비되지 않은 개방으로 1997년 IMF 위기 초래

- 직접적 원인은 대규모 차입경영과 단기 외채
- 준비되지 않은 개방과 세계 시장의 변화, 불투명 관치경제의 한계
- 사회 전체적으로 성장신화에 도취된 관성적 사고

## 2)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불안한 미래

#### ●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향적 성장률 하락

- 외환위기 이전 연평균 성장률 7.5% → 외환위기 이후 4.4% → 금융위기 이후 2.9%
-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이하 성장 지속(잠재성장률 3%대 중반 추정)
- 선진국들보다는 상황이 낫지만, 신흥국 특히 중국보다 낮은 성장률



[장기 경제성장을 추이]

● 저성장과 위기적 현상의 대두

- 고용부진 : OECD 평균(65%)을 밑도는 고용률(64.2%) 정체. 청년층 체감 실업률 22.1% (구직단념자, 취업준비자 등 포함)
  - 가계부채 증가 : GDP 대비 91%, 가처분 소득 대비 163%(2012년말). 2004년 70%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중
  - 자산가격 하락과 임대시장 구조 변화. 실질 주택가격 고점대비 20% 내외 하락(서울 강남권 30~40%↓) → 가계자산의 80% 정도가 부동산 자산이므로 실질적 미래 소득 감소. 전세가격 급등 지속 및 월세 전환 가속화
  - 심화되는 빈곤현상과 사회안전망 취약. 높은 자살률, 낮은 삶의 질, 최하위 행복도. 광범위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
  - 대기업-중소기업, 수출-내수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양질의 고용증가, 소득증대 등 성장의 낙수효과(trickle down effect)를 기대하기 어려움
  - 인구구조 전환의 과도기로서, 고용으로 흡수할 수준을 넘어서는 노동력 풀 규모(생산가능 인구 정점 시기, 청년과 중고령층이 함께 고용 위기)
  - 부동산 장기 침체로 부동산에 기반한 투자와 고용증대효과 한계
- ➔ 산업, 고용, 사회 양극화 심화

## ● 불안한 미래

-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저성장에 따라 선진국과의 격차해소가 지체되는 사이에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위협 현재화
  - 저출산, 고령화에 따른 성장둔화
  - 자산가치 하락과 가계부채문제로 인한 가계경제의 불안
  - 복지지출 등 지속적 재정 부담과 국가부채 확대 문제
  - 소득분배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소득이동(income mobility)도 낮아지고 있어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 희망이 어려움: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이동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빈곤탈출이 더욱 어려워진 상태
- ➡ 반전이 필요하다! 새롭고도 ‘좋은 성장’에 대한 갈증

### 1) 저성장에 대한 적응론

#### ● 저성장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적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논의

- 선진국 경험을 보더라도 저성장은 필연이며, 성장 자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성장 경향을 수용하면서 대책 모색 필요
- 정치적으로 환상을 부추기는 것은 부작용만 심화시킬 뿐임. 전형적인 부작용 사례가 '747 경제'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만 방해하였음
-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구조는 고용 없는 성장, 양극화 심화 성장을 야기하므로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의 병목현상 제거가 우선임

#### ● 적응론의 문제점

- '747'과 같은 환상을 심어준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옳으나 아직도 OECD 주요국의 50% 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
-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근의 현상에 대한 근원적 문제제기 없이 현재의 경제 사회 구조를 수용하려는 소극적 태도의 문제점

## 2)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돌파론

- 아직 과제가 많은 우리로서는 새로운 성장 회복은 필수
  - 성장 갈등은 전 국민적 현상으로, 단순히 심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음
  - 거시경제 전체 차원에서 볼 때, 구조 전환의 시간과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
  - 인구구조 전환기의 연착륙 : 고용기회 확대
  - 산업구조 전환의 연착륙 : 일자리의 질 평균을 상향
  - 개별 가계의 연착륙 : 자산 유동화와 가계부채 완화
  -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확대를 위한 자원 확보 : 세수 확대 노력
  
-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것은 성장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국민행복과 복지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경제사회모델의 모색을 필요로 함
  - 고도성장기의 한국경제발전모델은 이미 수명을 다 했으며 현재 한국의 경제발전수준에서 재도입할 수도 없음
  - 워싱턴 컨센서스(Washington Consensus)로 알려진 맹목적인 시장개방, 규제완화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정책의 한계는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명백히 표출됨
  - 모든 국민의 행복과 복지의 증진이라는 성장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하여 성장정책의 내용을 재정립할 필요
  
- ➡ 어떻게 ‘좋은 성장’을 할 것인가?



### 1) '좋은 성장'에 대한 다양한 요구

- 양질의 고용이 늘어나는 성장이 필요 → 청년실업 문제, 중고령층 일자리 유지는 물론 좋은 일자리(decent job) 확대
  -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장이 필요 → 중소기업 지원, 상생발전
  -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→ 투자확대, 기술발전, 규제합리화
  - 혁신과 창의력이 성장의 원천 → 교육, 보육, 콘텐츠, 융합, 창조성, 문화 강조
  - 성장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야 진정한 성장 → 최저임금, 비정규직 등
  -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있어야 도전이 가능 → 사회보험,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
- ➔ 분배친화적 성장, 선순환 성장, 진보적 성장, 행복한 성장, 창조적 성장, 생태적 성장, 사회투자형 성장, 동반성장 등 다양한 용어 사용

### 2) 한국 성장에서의 고려사항

- 높은 무역의존도 : 한국은 싱가포르, 네덜란드, 벨기에, 대만 등에 이어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며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높은 상황 ➔ 개방은 불가피한 상황을 넘어 이미 완전개방 상태라고 할 수 있으나 새로운 세계무역/대외개방에 대한 능동적 대처 필요
- 낮은 민간소비 : 가계부채, 과잉자산 축적, 낮은 근로소득 분배 등이 원인이 되어 민간

소비가 낮은 상황 ➡ 복지와 노동조건 개선은 민간소비와 밀접한 관련. 복지를 통한 성장 모색 필요

- 고용상황이 구조적으로 취약 : 단기적 과잉인구,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 속도, 높은 영세 자영업 비중 ➡ 사회안전망과 경제민주화적 요소의 결합으로 고용상황 개선 필요
- 당면한 거시경제 관리 : 당분간 전 세계 경제는 위기 이후 조정 국면. 양적완화, 환율 전쟁 등 거시경제의 위협요인이 존재 ➡ 경제심리를 포함한 조심스런 상황 관리 필요

### 3) 미국과 EU의 새로운 성장정책

- 미국 오바마 정부는 2011년 2월 경제성장과 미래 경쟁우위 유지를 위한 혁신 전략 보고를 제출(“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: securing our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”)

- 혁신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필수요소로 판단
- 혁신을 위한 기반조성, 시장기반 혁신 증진, 미국선도부문의 경쟁우위 실현 등 세부 목표를 제시

-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발표(2013년 12월 4일)

- 미국사회가 소득이동성은 하락하면서 불평등은 증가하는 문제점
- 불평등의 지속은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정책 필요
- 불평등 확대는 개인적인 기술, 교육수준의 문제일 수 있으나 정책상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점 지적: 최저임금수준, 노동조합의 교섭력, 노동자 보호망(safety net)

- 유럽의 포괄적 성장정책

- 유럽집행위원회는 2010년 3월 유럽의 향후 10년간 성장목표를 설정하는 Europe2020을

발표하면서 스마트 성장, 지속가능한 성장, 포용적 성장을 비전으로 제시

- 2020년 20-64세 인구 고용률 75% 달성
-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R&D 지출 GDP대비 3% 달성과 혁신지표 개발
- 온실가스 방출 1990년 대비 20%감축, 에너지 지출 중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30% 달성, 에너지 효율성 20% 증대
- 빈곤인구비율 25% 감축하여 2천만 빈곤선에서 탈출 유도
- 3대 성장이니셔티브, 7대 추진전략 제시

① 스마트 성장 : ① 혁신, ② 교육, ③ 디지털

② 지속가능 성장 : ④ 기후, 에너지, 이동성, ⑤ 경쟁력

③ 포용적 성장 : ⑥고용과 숙련, ⑦ 빈곤

#### 4) 새로운 성장론의 핵심 키워드

##### ● 새로운 성장 모델이 절실하다는 것은 분명

이제 한국은 선진국에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 더 이상 남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고, 그 미래는 스스로 혁신을 통해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.  
“What do you do when you reach the top?”(The Economist, 2011.11.12일자)

##### ● 성장과 형평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대안적 성장모델 필요

- 무조건적 개방과 규제완화에 기초한 성장추진의 폐해 : 신자유주의 성장모델, 워싱턴 컨센서스의 시효 소멸
- 유연한 노동시장, 기업경쟁력 강화론의 한계 : 낙수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분배악화만을 초래하고 지속적 성장(sustainable growth)을 보장하지 않음
- 대기업/중소기업, 수출기업/내수기업,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불균형성장의 고착화는 장기적 성장에 장애 요인 : 불균형성장은 분배구조악화와 국내 수요 기반잠식 초래, 노

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는 장기적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(리가르도 IMF 총재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지적, 2013년 12월 5일)

- 장기적 성장을 보장하는 혁신의 중요성: 기초학문, 산업기술 발전과 인적자원의 고도화 없이 장기적 경제성장 불가능

◎ 따라서 새로운 성장전략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**혁신 + 협력과 평화 + 균형 + 사람투자**

- 혁신

-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, 지원체계 구축
- 융합과 창조성 강화, 신성장 동력 육성

- 협력과 평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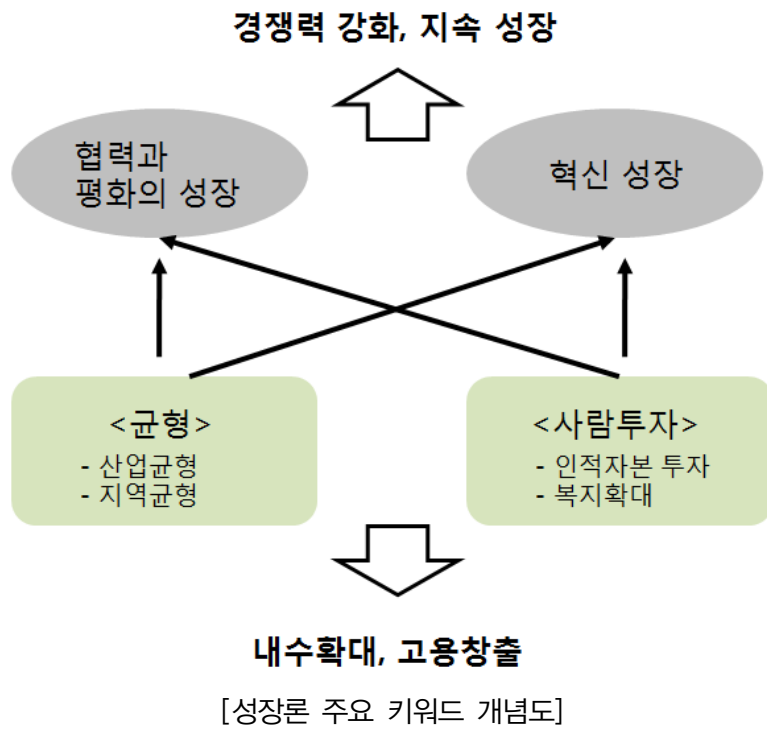
- 개방의 경제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동적 개방전략 확립
- 남북평화와 동북아 협력체제 모색을 통한 새로운 경제 활로 모색

- 균형

- 대기업/중소기업, 내수기업/수출기업, 제조업/서비스업 등 산업간, 기업간 과도한 불균형 시정을 통해 지속적 성장모색
- 지역균형 성장전략을 통해 전 국토의 역할분담과 성장자원 극대화

- 사람투자

- 교육, 보육 등 인적자본 투자 : 혁신성장의 기반
- 복지확대를 통한 안전망과 내수기반 강화 : 적극적 혁신 뒷받침, 일자리 확충



# 04

## ▶ 충남이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

-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전략의 4개의 핵심 키워드로 ‘혁신’, ‘협력과 평화’, ‘균형’ 그리고 ‘사람투자’를 제시하였음. 이를 충청남도의 발전에 적용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음.
  
- ‘혁신’ 측면에서 충청남도는 민간기업의 혁신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 혁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
  - ‘혁신’은 지식경제로의 이행, 그리고 투입위주의 성장에서 지속가능한 자생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
  - 그런데 혁신은 워낙 많은 영역이 관계되어 있어서 충남도만이 이를 주도할 수는 없음
  - 이른바 신성장 동력도 민간부문의 혁신에서 출발하는 것으로, 정부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역할
  - 아울러 충남도는 혁신 역량이 상호 시너지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해야 함
  
- ‘협력과 평화 경제’를 선도할 필요 있음
  - 우리나라는 이미 개방경제의 틀 속에서 그 미래를 구상해야 되는 조건에 놓여 있음
  - 최근 충청남도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제조업 입장에서는 개방경제 확대가 경쟁력 강화에 분명히 도움이 됨
  - 특히 대중국 교류 관문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진 충청남도로서는 협력과 개방경제를

선도할 필요가 있음


- 대중국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청남도는 각 시·군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내에 흩어져 있는 중국관련 기관들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들을 연계할 수 있는 허브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임
- 한편, 국가 전체적인 분위기 형성 추이를 감안하면서 남북 평화를 통한 호혜적 경제협력과 함께 동북아시아, 유럽을 잇는 자원, 물류 연결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. 현 상황에서는 대중국 교류활성화를 통한 우회접근이 유효할 것임

● ‘균형’은 충청남도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제 영역이고, 전국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

- 사실 충청남도의 경제발전은 균형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, 충청권은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추로서 기능을 부여 받았고 또한 그런 방향으로 역대정부가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임
- 충청남도는 균형발전의 전국적인 시너지를 기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고, 다른 지역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면서 광역경제권별로 특화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의제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
- 이를 위해 지역차등지원제도 도입, 실질적 지방분권의 추진, 지역인재할당제,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, 농업직불금의 확대 및 제도개선 등의 의제를 선도해야 할 것임

● 마지막으로 ‘사람투자’는 우리나라 전체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일 뿐 아니라, 충청남도 차원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로 가장 중요한 영역임

- 광역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기존의 재정지출 관행에서 탈피하여 사람투자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
- 특히 유아기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기반을 닦는 것은 도전해 볼만 한 과제임

- 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임
- 또한 영유아 정책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한하지 않고, 가족지원, 지역사회서비스 등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,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 

김 찬 규 초빙책임연구원

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

041-840-1124, kck0564@cdi.re.kr



## ◆ 참고 자료 ◆

- 고영선 2012, “한국경제의 현황과 정책의 기본방향,” 고영선·이재준·강동수·안상훈·유경준 편, 『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』, KDI
- 김상조, 2012a, “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”, 동방성장연구소 심포지엄.
- 김상조, 2012b, 『종횡무진 한국경제』, 오마이북.
- 신정완, 2006, “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구상”, 유철규 편, 『혁신과 통합의 한국경제모델을 찾아서』, 함께 읽는 책, 13-39
- 신정완, 2009, “한국 진보, 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”, 한반도선진화재단·좋은정책포럼
- 안현효·류동민, 2010, “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전개와 이론적 대안에 관한 검토”, 『사회경제평론』, 제35호, 237-282
- 유경준·문형표·윤희숙·김희삼·김영철·김인경·황수경 2012, “사회정책분야,” 고영선 외 편 『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』, KDI
- 유종일, 2009, “한국 진보, 글로벌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”, 한반도선진화재단·좋은정책포럼
- 이근, 2013. 경제발전론의 최근 동향, 한국경제발전학회, 한국사회경제학회, 한국비교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문
- 이상이, 2012, “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방향”, 복지국가소사이어티
- 이정우, 2007, “한국경제, 제3의 길은 가능하다”, 프레시안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주최 강연
- 장하준, 2010, 『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』, 부키
- 장하준·정승일, 2005, 『왜도난마 한국경제』, 부키
- 주상영, 2013a. 진보적 성장 담론의 현황과 평가, 사회경제평론 41호
- 충청남도, 2012, 「충청남도 종합계획(2012-2020)」
-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편. 2012. 한국형 네트워크 국가의 모색, 백산서장

## 2014년도 충남리포트

구분	제 목	집필자	발행일
2014-01	동아시아 철새 보전, 서천갯벌에 달렸다	정옥식	2014.01.01
2014-02	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	이충훈	2014.01.09
2014-03	충남의 협동조합,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	송두범	2014.01.21
2014-04	이제!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	이상진	2014.01.27
2014-05	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,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	이민정	2014.01.28
2014-06	조류인플루엔자(AI) 관리 대책, 예방이 최우선이다!	정옥식	2014.02.11
2014-07	지원·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	이인배	2014.02.13
2014-08	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	김양중	2014.02.20
2014-09	사라지는 농촌마을! 한계(限界)마을정책 도입해야	조영재	2014.02.25
2014-10	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	김양중	2014.02.28
2014-11	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	이관률·정현희	2014.03.06
2014-12	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	임형빈	2014.03.13
2014-13	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	김원철	2014.03.27
2014-14	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	최병학	2014.04.03
2014-15	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	고승희	2014.04.16
2014-16	충남 논·밭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	정옥식	2014.05.08
2014-17	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	임준홍·홍성효	2014.05.15
2014-18	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·협력 추진 방안	오명택·김정연	2014.06.12
2014-19	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	김양중	2014.06.19
2014-20	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	송두범	2014.06.24
2014-21	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	이수철	2014.07.14
2014-22	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	이호중	2014.07.16
2014-23	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·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	이정만·고승희	2014.07.17
2014-24	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	최은희	2014.07.21
2014-25	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	김양중	2014.07.23
2014-26	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	장종익	2014.07.28
2014-27	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	주운현	2014.07.30
2014-28	충남 정책 키워드(3농혁신, 사회적경제)의 SNS 데이터 분석	임화진	2014.07.31
2014-29	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	유병덕·최영화	2014.08.05
2014-30	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	김양중	2014.08.07
2014-31	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	박철희	2014.08.11

■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([www.cdi.re.kr](http://www.cdi.re.kr))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,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!

■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,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.